

##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핸드북: 서울편Ⅱ’ 발간

“말로는 동행, 실제로는 ‘이별’...

오세훈 시장의 ‘남 탓’과 ‘불통’이 빚어낸 총체적 난국”

- 이재영 원장,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진 시민의 고통 기록... ‘약자와의 동행’이 ‘약자와의 이별’로 변질된 현실 고발”
- 채은동 연구위원, “주택 인허가 물량 14% 감소를 지적하니 ‘전세사기 탓’이라는 서울시... 인천·경기는 전세사기 무풍지대였나? ‘남 탓 행정’의 신기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다각도로 분석한 두 번째 특별정책브리핑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핸드북 - 서울시민의 눈물Ⅱ」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19일에 발간된 1차 브리핑에 이어 부동산, 복지, 청년, 언론 등 시정 전반에서 드러난 정책 실패와 모순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며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비판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지방정부의 성적표는 화려한 조감도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로 매겨져야 한다”며, “이번 정책브리핑은 겉으로는 ‘동행’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시민을 ‘홀대’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이중성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시정 실패 백서’이자, 무너진 서울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절박한 제언”이라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오세훈 시장의 실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심화되는 ‘강남-강북 지역 격차’와 ‘남 탓 부동산 정책’이다.

2025년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6.2% 상승했지만, 나머지 22개 구의 매

매가격 상승은 7.0%에 그쳐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 또한, 주거환경, 문화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생활만족지수에서도 서초구(1위)와 강북구(25위)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연구원은 오 시장이 선거 때마다 ‘강북 전성시대’를 외치지만, 실제 강남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둘째, 약자·청년·언론 등과의 ‘비정한 이별’이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해 공공돌봄을 포기하고 300여 명의 노동자를 실직으로 내몰았다. 청년 정책 역시 ‘청년안심주택’이 전세사기의 온상이 되며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했고, 위기 여성 청소년 지원 기관인 ‘나는봄’, ‘나무’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퇴행을 거듭했다. 또한, TBS(교통방송)에 대한 지원 중단과 폐지 수순은 “마음에 안 들면 없앤다”는 식의 언론 탄압 사례로 기록됐다.

### **셋째,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반복이다.**

오시장이 교육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내건 ‘서울런’은 계획 대비 이용률이 26%에 불과하고 사교육 참여율을 낮추지 못해 ‘사교육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외국 사례를 들어가며 야심차게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역시 고소득층, 강남 쏠림 현상과 인권 침해 논란 끝에 오 시장 스스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실패를 자인한 대표적 졸속 행정으로 꼽혔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지난 1차 보고서(주택 공급 부족 지적)에 대한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해명을 다시 통계로 비판했다. 채 연구위원은 “지난 보고서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각각 14%, 36% 급감한 사실을 지적하자, 서울시는 뜬금없이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공급이 줄어서 그렇다’는 변명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박원순 10년 탓’을 소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서울처럼 심각했던 경기(전국 2위)와 인천(5위)보다 서울(1위)의 인허가 감소폭이 무려 5.6배나 큰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연구원은 12호까지 발간된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를 종합한 통합 소책자를 2월 3일 발간할 예정이다.